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10. 28.(목) / 총 2매(본문2)	
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정채교, 사무관 장원 • ☎ (044) 201-4602	
보도일시	2021년 10월 29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9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하는 철도안전 구현

### -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('23~'27) 수립 추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, 인공지능(AI)·빅데이터·사물인터넷(IoT)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반영된 『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('23~'27)』(이하, 제4차 종합계획) 수립\*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\* (법적 근거) 철도안전법 제5조

□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, 지난 제3차 종합계획('16~'22)에 이어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·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(오송, '27년 예정)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·빅데이터 기반의 新철도관제시스템\*과, 무인운전 철도차량 시스템,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·구성하여, 평상시는 물론 사고·장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\* 열차 운행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간 예측 및 대안을 제시하고, 열차 스케줄 관리·사고 시 대체운행계획 수립 등 자동화 추진

- 또한, 사물인터넷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도사고·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, 사고·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무인운전의 일반화, 노면 전차\*(트램)와 같은 新교통수단의 도입 등 미래 철도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.

\* 현재 철도기술연구원과 부산이 트램실증사업을 진행 중(오륙도선, '23.12월 개통 목표)이며, 그 외 서울·대전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도입을 계획 중

- 국토교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,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\*을 실시(10.28. 공고)할 예정이다.

\* (용역기간 / 용역금액) '21.11월 ~ '22.12월(약 13개월) / 1억 1,000만 원 이내

-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, 「철도안전법」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 후, '철도산업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,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제4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안전정책과 장원 사무관(☎ 044-201-460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